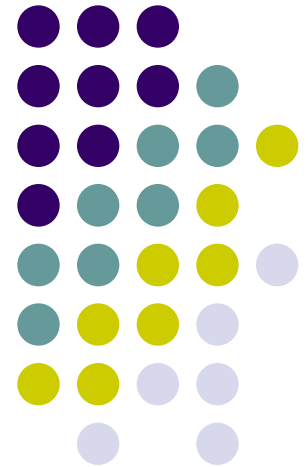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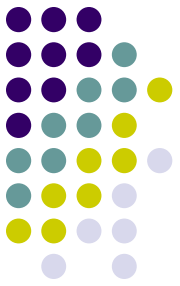


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웹 접근권

국가인권위원회
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
조 형 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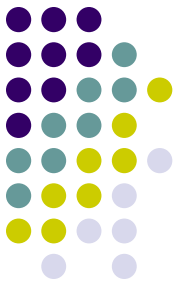




1.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

● 법의 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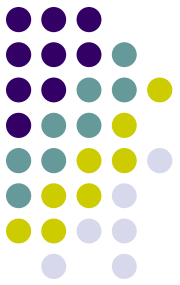
1. 총 칙
2. 차별금지 (고용, 교육,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)
3.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
4.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
5. 손해배상, 입증책임 등
6. 벌 칙



● 차별의 종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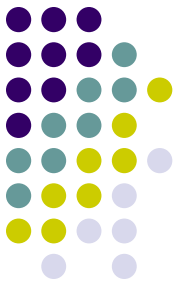
- 직접차별
- 간접차별
-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

장애인의 실질적인 평등
보장을 위한 조치이자,
장애인차별의 특수성과
밀접히 관련된 개념



● 차별예외사유

- 과도한 부담
- 현저히 곤란한 사정



< 국가인권위원회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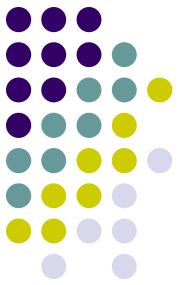
차별시정, 권고

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
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
소위원회를 인권위에 두되,
위원회의 구성·업무 및 운영 등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인권위 규칙으로 정함 (제40조)

< 법무부 >

시정명령

인권위는 권고를 한 경우
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(제42조)
법무부장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
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의 권고를
불이행하고,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
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, 피해자
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
등의 경우 시정명령 가능 (제43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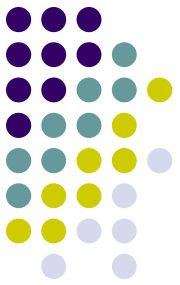


2.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권

-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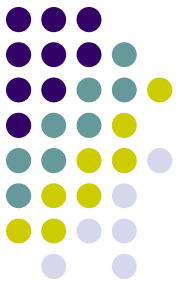
제21조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

시행령 제14조 필요한 수단으로,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규정



●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자 (법 제3조)

- 제4호 (공공기관)
- 제6호 (교육기관)
- 제11호 (문화예술사업자)
- 제12호 (체육)
- 제14호 (복지시설 등)
- 제16호 (이동 및 교통수단 등)
- 제18호 (의료인 등)



-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할 대상자들의 단계적 범위(2009.4.11.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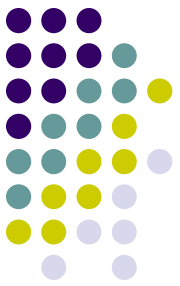
- ✓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

- ✓ (교육기관, 교육책임자) 국·공·사립 특수학교, 국·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,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·공립 각급학교, 장애아전담 보육시설

- ✓ (의료기관 등)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

- ✓ 복지시설, 시설물 관련 행위자

- ✓ (사용자, 노동조합)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 사업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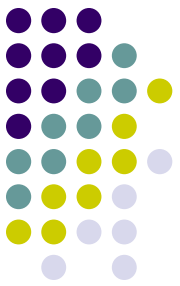


-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할 대상자들의 단계적 범위(2010.4.11.~)

✓ (문화·예술사업자) 국가·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,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법률상 설립된 기관, 국립중앙도서관, 「도서관법」에 따른 공공도서관,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른 국·공립 박물관·미술관, 국·공립 대학박물관·미술관

-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할 대상자들의 단계적 범위(2011.4.11.~)

- ✓ (교육기관, 교육책임자) 국·공립 유치원, 국·공·사립 각급학교,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·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, 영재학교 및 영재 교육원
- ✓ (의료기관 등) 「의료법」에 따른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
- ✓ (사용자, 노동조합)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 사업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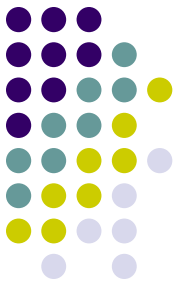
-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할 대상자들의 단계적 범위(2012.4.11.~)

- ✓ (문화·예술사업자)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[별표1]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,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사립대학박물관, 사립대학미술관

-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할 대상자들의 단계적 범위(2013.4.11.~)

- ✓ (교육기관, 교육책임자) 사립유치원, 평생교육시설, 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상 교육훈련기관 등
- ✓ (의료기관 등) 모든 의료기관
- ✓ (사용자, 노동조합)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 사업장
- ✓ (체육관련 행위자), (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), (시설물 관련 행위자)
- ✓ (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법인)

-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할 대상자들의 단계적 범위(2015.4.11.~) 생략



3. 미국의 웹 접근권 관련 판례

- 미국판례 (NFB vs. Target, 200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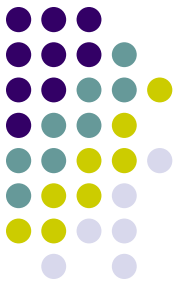
웹이 장소(place)라는 물리적 공간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

– 접근성 없는 웹 사이트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(ADA)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최초의 법원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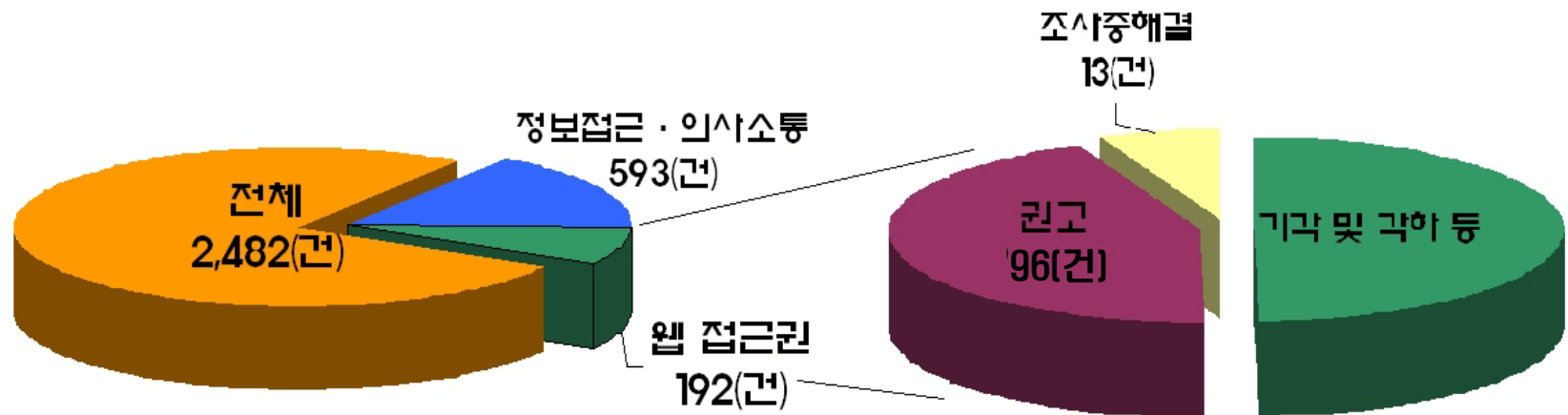
- 미국재활법 508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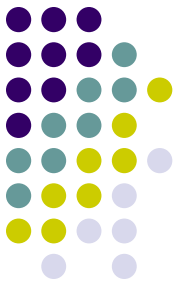
연방정부와 함께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사업자에게도 계약의 내용이 웹에 의하여 공포될 경우 같은 수준의 웹 접근성 제공의무 부과

4. 국가인권위원회 웹 접근권 관련 진정사건 접수 현황



진정사건 접수 현황
(2008.4.11-2011.12.31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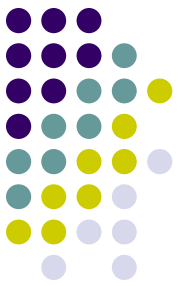
5.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

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이 웹 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다면 차별

비장애인이 접근하여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장애인에게도 제공되어야 함
- 주요기준 :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0 (4개 원칙, 13개 지침으로 구성)

대상기관이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,
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고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간주될 수 있음

단, 동 지침을 준수했더라도 장애인의 웹 사이트 접근 및 사용이 어렵다면
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



6. 웹 접근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

● 디지털교육콘텐츠 이용에 있어서의 시각장애인 차별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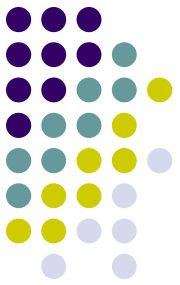
<진정요지>

진정인은 시각장애인교사로서 2008.1.14.~2.17. 사이에 00원격교육연수를 수강하였으나, 강의내용 중 일부가 교육교재로 대체됨에도 점자나 파일형태로 제공되지 않았으며, 강의내용을 마우스로 클릭해야만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등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음

<인권위 결정요지>

디지털교육콘텐츠에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시각장애인을 보조기기인 스크린리더기가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고, 키보드만으로는 모든 학습내용을 이용할 수 없는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파일 형태의 보조교재가 제공되지 않은 것은 피진정인이 교육, 훈련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임





<인권위 주문>

권고수용

1. 피진정인에게 [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]을 참고하여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격교육 콘텐츠를 보완할 것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파일형태의 보조교재를 제공할 것 권고
2.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[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]을 참고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[e-러닝 품질관리 가이드라인]을 개정할 것 권고

● 홈페이지 웹 접근성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[2]

<진정요지>

00시각장애인복지관, 00전자주민
자치회, 00시민참여포털 등의
홈페이지가 웹 접근성이 취약해
시각장애인 등이 접근, 이용하는데
제약이 큼.

이들은 ‘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
지침 2.0’ 기준에 미달하므로
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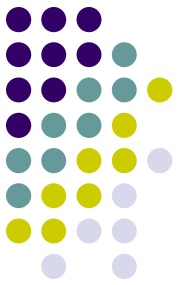
<인권위 결정요지>

상기기관은 「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」
제14조 제1항 [별표3]의

‘정보통신·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
편의제공’의 단계적 범위에 해당하는
시설이므로, ‘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
지침 2.0’을 반영하여

홈페이지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.

다만, 본 사건은 조사 중
피진정기관이 홈페이지를 개편했거나,
앞으로 개편할 구체적인 계획을
갖고 있어 조사 중 해결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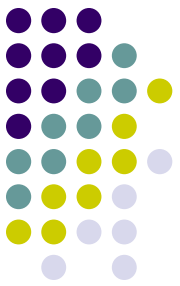
● 방송사 웹 사이트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[3]

<진정요지>

스크린리더를 사용하고 있는 시각 장애인이 해당 웹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,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, 적절한 링크 텍스트, 바로가기 서비스, 모든 기능 키보드 사용, 페이지 제목, 테이블 설명 기능 등이 제공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등이 해당 웹사이트를 접근 및 이용하는데 제약이 큼

<인권위 결정요지>

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웹사이트 및 멀티 미디어 콘텐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, 피진정인들의 재무현황 및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된 웹 사이트 구축에 수반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피진정인들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 제20조 및 제21조,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 제3호를 위반한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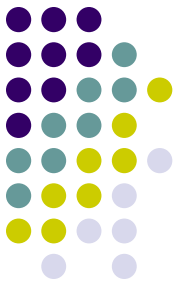


<인권위 주문>

수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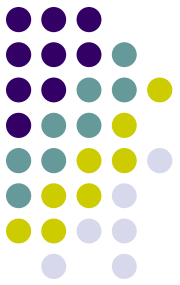
피진정인들에게,

1. 국가표준인 「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0」을 참고하여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개선할 것
2. 장애인을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대체수단으로 자막, 원고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, 제공방식에 있어서도 자막을 음성과 동기화시킨 폐쇄자막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동등한 내용의 형태로 제공할 것 권고



7. 장애인 웹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언

-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웹 접근성 지침에 따른 웹사이트 구축 필요
 - ▶ 이미지나 동영상은 시청각 장애인에게 정보로써 전혀 기능하지 못하므로, 반드시 이를 대체할 별도의 설명이나 자막을 제공하여야 함
 - ▶ 시각장애인은 마우스 대신 키보드만으로 화면상의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, 저시력인의 경우 글자 확대가 가능해야 함
 - ▶ 플래시나 자바 스크립트, 팝업창 등을 남용하는 것을 지양하고, 대체설명이나 사전안내를 제공해야 함



● 웹 접근성에 대한 관계부처의 홍보와 개선 노력의 확대 필요

- ➡ 2009년 4월 11일부터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의 의무화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홍보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
- ➡ 또한,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웹 접근성 제고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노력도 확대해야 함
- ➡ 특히, 2013년부터는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영역에 있어서의 단계적 범위가 법인 등으로 전폭 확대됨에 따라,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홍보와 안내,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감사합니다.

